

文대통령, 후임 법무장관 추미애 내정

조국 사퇴 52일만에 단행...檢개혁 의지 반영 秋 "시대적인 요구...많은 저항에 부딪힐 것"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에 5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추미애(61) 의원을 내정했다. 추 의원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내정은 지난 10월14일 조국 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물러난 지 52일 만이다. 지난 8월9일에 이어 118일 만의 개각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 내정자는 소외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 중심의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며 "정계 입문 후 현직사상 최초로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와 국회의원으로 쌓은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을 비롯해 그간 추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청와대는 국무총리에 대한 인선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차기 총리로 유력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진표 민주당 의원에 대해 노동단체 등 시민사회가 반발하는 등 막판 변수가 생기자 법무장관 인선만 우선 발표한 것

으로 알려졌다.

개혁 성향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추 내정자 기용은 문 대통령이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선언한 상황에서 더욱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조국 파동'은 물론이고 최근 하명 수사 및 검찰 무마 의혹으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정운영 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검찰

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추 내정자에게는 검찰개혁 완수라는 중책이 부여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5선의 안정갑 의원은 "추미애를 내세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 내정자는 문 대통령이 낙선했던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당 중앙선대위 상임공동위원장을 맡

는 등 문 대통령 당선 공신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은 국격에 걸맞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요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풀어가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내정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대통령님의 메시지는 따로 없더라도 제가 너무나 잘 안다"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많은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 길이 매우 험난하리라는 것을 여러분도, 국민도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수기자



소감 말하는 추미애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패스트트랙법안 9일 일괄상정 전망

정기국회 종료 앞두고 '패트·하명수사 의혹' 대치 격화

정기국회 폐회일(10일)이 임박하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비랑 끝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5일 현재 정기국회 폐회까지 불과 닷새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일괄 처리 수순에 들어갔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력 저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및 검찰 무마 의혹이 계속 확산하면서 여야는 물론 여권과 검찰 간 대립이 심화하

고 있다.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한국당에 2차로 최후통첩을 했다.

4+1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지난 3일 한국당에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사전에 철회할 것을 요청한 데 이어 이날 다시 한국당의 협상 참여 전제조건으로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이 최종 불발될 경우에 대비, 4+1 협의체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4+1 협의체 차원에서

는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수정안을 만드는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수처법의 경우 분회의 의결정족수 확보가 가능한 안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을 기준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의석 규모와 연동률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반격에도 당력을 집중했다. 민주당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검

찰의 수사가 배경에 검찰개혁 저지 의도가 있다고 보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른바 '2대 악법 저지 및 3대 청와대 게이트'를 연결고리로 대여공세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공수처에 대한 원천 반대 입장을 기조로 하명 수사 의혹, 검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 등을 일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선거법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7일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낼 예정으로 11일께 선거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때까지 민주당과 한국당이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면 여야 간 전면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연합뉴스

황주홍·서삼석, 한농연 '국감 우수의원상'

민주평화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선정 '2019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황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여야 의원들의 충돌이나 파행 없이 국정감사를 이끌었다.

특히 공익형 직불제 개편, WTO 개도국 포기 선언, 농산물 가격 폭락,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등 각종 농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기간 동안 단 한 차례의 파행 없이 원활히 회의를 진행해, "300만 농어민의 든든한 뒷배", "짜우지 않는 국회" 등 황 의원 본인의 소신을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진수기자



황주홍 서삼석

채소류 가격안정을 위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실시 촉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소독제 효능 문제 ▲가축전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가칭)방역청 신설 촉구 ▲농어촌 인구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자체와 지역농협간 협치 모델 제안 등 문제점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를 하며,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이다. /김진수기자

'광진乙' 이낙연 출마시 오세훈과 '빅 매치'

與 총선 불출마자 10명 넘겨...추가 개각시 더 늘어날 듯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자 내년 총선에 추 의원의 서울 광진을 지역에 누가 후임으로 나설지를 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총선 역할론'이 제기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광진에 나설 경우 이미 광진에 도전장을 낸 자유한국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의 '빅매치'가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 전 시장은 올해 초 한국당 광진을 당원위원장을 맡아 지역 표발을 다져오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추 내정자와 경선을 벌였던 청와대 행정관 출신 김상진 건국대 교수가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당 상대가 '거물급'인 만큼, 체급을 고려한 인사의 전략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곧 국무총리 교체 포함 개각이 이뤄진다면 이 총리가 당으로 돌아와 광진을 지역에 직접 나선 가운데 총선을 진두지휘하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한편 추 내정자의 입각으로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은 10명을 넘어섰다. 민주당이 진행 중인 현역 의원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서 불출마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까지 당내에서 불출마를 공식화한 의원은 9명이다. 동시에 내년 총선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을 통해 현역 의원들이 내각 명단에 추가로 이름을 올리려면 불출마자는 더 늘어난다. 여기에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현재 기준 23명)가 최종 확정되면 민주당의 출마자 '물갈이' 규모는 최소 30-4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광주시선관위 총선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1월6일부터 단계별 근무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정치관계법 안내 및 예방·단속활동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면 여야 간 전면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연합뉴스

으로 광주시선관위 1명, 동구선관위 18명, 서구선관위 23명, 남구선관위 19명, 북구선관위 23명, 광산구선관위 23명이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광주시선관위 홈페이지(http://gj.nec.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류를 구비해 12월9일부터 13일까지 근무를 희망하는 해당 선관위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친 후 12월27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선발된 공정선거지원단은 1월6일부터 단계별로 근무한다. /김디이기자

http://www.kukje9.co.kr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맛과 멋을 새롭게”

출장뷔페 전문외식산업

▶ 자매회사: 제사나라 062)527-0044/011-602-2278

- 야외 결혼식
- 칠순잔치
- 체육대회
- 야유회

국제외식산업(주) 문의.062)262-2278/011-602-2278